



보도시점 2024. 2. 27.(화) 10:30(회의 종료시) 배포 2024. 2. 27.(화)
이후 사용

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에 박차 - 「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」도 논의 -

- ▷ 인증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인증제도의 글로벌 스탠드화를 위한 「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 규제 정비」 방안 마련
 - 한 총리, “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갈 것”
 - 257개 인증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, 실효성 낮은 인증 폐지(24개), 유사·중복 인증 통합(8개), 인증비용·절차간소화(66개), 유사인증 제외(91개) 등
- ▷ 산불, 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과 국가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「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」 마련
 - 한 총리, “범부처 협업을 통하여 일상화·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대한 선제적 예방·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”
 -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차단, 산불감시 ICT 플랫폼 확대, 초동진화 역량 강화, 산사태 예측력 및 현장대응력 강화, 대피제도를 통한 주민안전 확보 등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7일(화) 오전,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(서울↔세종 영상회의)를 주재했다.
 - 이날 회의에서는 「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 규제 정비」, 「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」, 「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」을 논의했다.

< 안건 1.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 규제 정비 >

□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법정인증(257개)을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※ 해외사례 : 해외 주요국의 법정인증은 **안전·의료·보건** 등으로 한정 운영 중
→ (美) 93개, (EU) 40개, (中) 18개, (日) 14개

- 기업은 인증을 취득·유지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왔으며, 소관 행정기관도 국민의 생명·안전 등을 위한 수단으로써 인증을 활용하기보다 진흥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.
- 이에,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**인증의 통·폐합, 절차 간소화, 유효기간 연장** 등 인증제도 정비와 함께 제조자가 기준 적합성을 스스로 선언하고 책임지는 **사후관리 방식**을 도입하는 등 「인증규제 개선방안」을 마련하였다.

1. 인증제도의 정비 (통·폐합, 개선)

- 전체 257개 법정 인증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정비하여 189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.
- 인증의 적절성, 실적 등을 검토하여 실효성이 낮고 기업의 수요가 적은 24개 인증은 과감히 폐지하고, 인증 대상, 시험 항목 및 절차 등이 유사한 인증은 8개로 통합하며, 66개 인증은 절차 간소화와 유효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비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.
- 또한, 기술기준 미비 등 인증 요건에 부적합한 91개는 인증에서 제외하여 「e나라 표준인증」 목록에서 삭제하고 인증마크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.

2. 인증의 글로벌 스탠더드화

- (자기적합성선언 확대) 기업이 스스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하고, 제품 등의 안전성을 스스로 책임지는 **사후관리 방식**으로 인증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.
- ※ 자기적합성 선언(DoC: Declaration of Conformity): 제조자가 스스로 또는 시험·검사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적합을 선언하는 제도

- 신규로 KS인증, 방송통신기기 인증(KC인증), 친환경선박 인증에 도입되며, 전기용품·생활용품 인증(KC인증)은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.
- (민간 인증기관 허용) 신제품 출시 등 다양한 인증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비영리기관 주도의 인증기관을 민간기관으로 확대하여 민간의 인증 경험 축적, 역량 확보 등 국내 인증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.
 - * 「전기용품 인증(산업부)」, 「방송통신기자재 인증(과기정통부)」, 「소방용품 성능인증(소방청)」
- (해외인증 인정 확대) 국가간 중복 시험인증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약 (MRA: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) 추진 및 민간분야 MOU*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 - * 산업부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49개국, 89개 인증, 186개 품목 체결(23. 12)
 - 상대국의 특정 인증기관을 자국의 법령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·운영함에 따라 추가 절차 없이 교역제품에 대한 통관·유통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.

3. 관리시스템 개선

- (인증신설 절차 강화) 인증의 총괄기관(국가기술표준원)과 소관 부처간 인증에 대한 해석상 이견 상존 및 인증 신설 절차 미흡 등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.
 - 이에 국가표준기본법에 인증(認證, certification) 정의를 명확히 하고, 신설 인증의 적절성과 인증 정의 부합성 등을 심의하도록 「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(산업부 고시)」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.
 - 아울러 심의에 통과된 인증을 「e나라 표준인증」(standard.go.kr)에 등록하고 인증 마크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다.
- (공공조달 가점 정비) 공공 조달 참여를 위해 기업들은 다양한 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며,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벤처·중소기업은 인증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.
 - 이에, 불필요 인증 취득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비인증 제품과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인증낙찰 가점을 정비할 계획이다.

- 이번 인증의 통·폐합과, 시험·검사 비용 축소 및 자기적합선언 도입 등으로 약 1,527억원 기업부담이 경감되고, 친환경선박의 해외 수주경쟁력 제고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.
- 국무조정실에서는 「인증규제 정비방안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,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.

< 안건 2.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 방안 >

- 최근 기후변화(고온건조, 집중호우)로 인하여 산림재난(산불, 산사태, 산림병해충)이 일상화·대형화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국민안전, 국가자원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.
 - * 산불: '10년대 보다 '20년대에 대형산불 건수 5배(1.3건→6건), 면적 10배(857ha→8,368ha)
 - 산사태: '22년 대비 '23년 산사태피해 건수 2배 증가(1,278건→2,410건)
 - 산림병해충: '22년 대비 '23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3배 증가(38만그루→107만그루)
-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부처 협업으로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「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」을 마련하였다.

1. 빈틈없는 산불대응체계 구축

- 우선, 산불발생 주요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연접지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청, 농촌진흥청, 환경부,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한다. 산림연접지 논·밭을 파쇄팀이 직접 방문하여 영농부산물 파쇄·수거에 집중한다.
 - * 산불발생 주요원인: 입산자실화(38%), 영농부산물 소각 등(29%), 담뱃불실화(7%) 등
-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체계인 'ICT 플랫폼'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산불확산 위험시에는 산불확산예측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까지 공유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한다.

- 또한 산림청, 국방부, 소방청, 경찰청 등과 협업으로 산불유관기관 헬기 (190대*) 공중진화 공조체계(부품 및 진화지원 등)를 구축하여 산불대응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. 그리고, 담수량이 큰 해외 임차헬기**(대형5, 중형2)를 배치하여 러시아 헬기 가동률 감소를 극복할 계획이다.

* 대형 임차헬기(CH-47)는 운용 중단 예정 러시아 헬기(카모프)보다 진화효율 8배

** 산림청(45), 소방청(29), 경찰청(10), 군(29), 지자체(76), 국립공원(1)의 총 190대

2. 극한호우에 대비하여 산사태 예방·대응체계 강화

- 다음으로,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부처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던 위험사면 정보*를 산림청에서 통합·공유한다.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‘산사태정보시스템’에 급경사지, 도로비탈면, 태양광시설지 등 타 부처에서 따로 관리되던 위험사면 정보를 통합하여 ‘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’으로 개편할 계획이다.

* 급경사지^{행정안전부}, 도로비탈면^{국토교통부}, 농지^{농림축산식품부}, 문화재^{문화재청}, 태양광^{산업통상자원부}, 등 201만건

- 또한 현재 2단계(주의보, 경보)로 운영되고 있는 산사태예측정보 체계를 세분화하여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. 현재의 예측정보체계는 토양함수지수*를 기반으로 주의보(토양함수지수80%), 경보(토양함수지수 100%)로 운영되고 있다. 여기에 ‘예비경보’(토양함수지수90%)를 추가·운영하여 약 1시간** 가량의 추가 대피시간을 확보할 계획이다.

* 토양함수지수: 토양이 최대 머금을 수 있는 물의양 대비 현재 머금고 있는 물의양

** 토양함수지수 90% → 100% 도달에 평균 1시간 소요

3. 신속·정확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·방제체계 구축

- 마지막으로,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는 ‘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 구역*’으로 지정하여 방제역량을 집중한다.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방제 이행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고, 그동안 관리주체가 달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힘들었던 국립공원(환경부), 군사시설(국방부), 문화자연유산보호구역(문화재청), 도로변(국토교통부) 등은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한다.

* 대구 달성군, 안동 임하면, 고령 다산면, 성주 선남면, 밀양 상남면, 포항 호미곶면 등 4만ha

- 또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반의 소나무재선충병 탐지 시스템 개발을 '24년까지 완료하고,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현장에서 30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진단키트 활용을 확대하여 신속한 진단체계를 마련하는 등 과학적 기반의 빈틈 없는 예찰·진단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.

- 정부는 금번 「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가 자원을 보존하고 국민의 재산·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.

< 안건 3.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 >

-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월 ~ 2월 개최되었던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도 논의하였다.

- △생활규제 개혁, △늘봄학교 및 교육 분야, △문화·체육·관광 분야의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그간의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을 점검하였다.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	책임자	팀 장	장용희 (044-200-2056)
		담당자	서기관	이영승 (044-200-2535)
담당 부서 <인증규제>	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지원국	책임자	과 장	박경덕 (02-3778-3430)
		담당자	사무관	정의용 (02-3778-3433)
	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	책임자	PM	정경택 (02-3778-3533)
		담당자	부PM	조성민 (02-3778-3475)
담당 부서 <산림분야안>	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최민지 (044-200-2231)
		담당자	사무관	조한겸 (044-200-2233)
<공동>	산림청 산사태방지과	책임자	과 장	박영환 (042-481-4270)
		담당자	사무관	이민수 (042-481-4033)

